

# 아동·부모 함께 행복한 전주 만든다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설 등 촘촘한 복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고 방과 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촘촘한 복지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올해 아동 양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67억 원 늘어난 총 2855억 원의 아동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해 한층 강화된 보육과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어린이집 연장 보육(아침, 야간, 24시간) 확대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 확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설 등 양육의 부담은 줄이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무상보육 정책에 발맞춰 올해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1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3~5세였던 지원 연령이 올해부터는 1~5세까지 확대되며, 특히 1~2세 영아에게 월 3만 원의 필요경비를 신규 지원해 보호자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내·외국민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을 제공키로



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고 방과 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했다. 외국인자녀 보육료는 올해 3월부터 전주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연령별로 월 8만4000원부터 17만 원까지다. 단, 발발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시는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는 4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24개월~86개월 영유아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 이용에 상관없이 기존 만 8세미만까지 지원되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0만 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공적 돌봄 체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는 야간연장돌봄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시는 올해부터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연장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호자의 야간 근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 돌봄 인력을 상시 배치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최대 밤 12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야간연장 돌봄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으로,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을 편성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끝으로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남성 육아휴직자 51명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위해 공적돌봄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동돌봄 정책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신학기 대학생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나선다

### 전주시, '시·구 합동반 구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전주시가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생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해 대학생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구 합동반을 구성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등 대학이 인근과 원룸·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실명 의무 이행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전세사기 연관 의심 거래 여부 △중개보수 과다 수수 여부 등이

다. 특히 시는 강릉전세와 이증계약,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매물에 대한 중개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지도점검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대학생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키로 했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학생들은 주거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큼, 중개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

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된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 적극 행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

### 전주시,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우수지역업체 참여 이끌어내

전주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방문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전주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설득을 통해 공사 비중이 가장 큰 철근콘크리트 분야에 지역우수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으로 참여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인 (주)광신종합건설(대표 이기석)은 현재 덕진구 고량동에 지상 22층, 6개 동, 3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지역건설업체를 하도급사로 선정했다. (주)광신종합건설은 지난해 12월 전주시·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체결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뿐 아니라 자체 납품에도 지역건설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는 등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성사된 지역업체 참여 성과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시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과 공사 역량을 적극 어필하며 지역업체 참여가 상생과 품질 확보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물로 평가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전세 경쟁 중에서도 공사비와 비중이 약

40~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핵심 공정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설공사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단순한 행정 요청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설명하며 설득해 온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 연장

전주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농가 경제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전 기종으로, 임대료의 50%가 자동 감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 농가와 고



영 농업인 등 많은 농가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